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8. 6. Vol 253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돌무지탑

후미진 산모퉁이 산새들도 쉬는 곳에
누군가 무던하게 터잡아놓은 돌무지탑
완성이 뭐 대수냐며
나날이 크고 있다

가슴 속 소원 담은 뜨거운 막돌 하나
어떤 이의 소원 위에 또 다시 얹혀질 때
돌 틈새 지나던 바람도
가만, 귀 기울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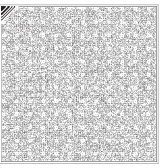
이뤄도 자고 깨면 이를 것만 쌓이는 생(生)
생김생김 만큼이나 서로 다른 비나리들
지은 죄 뉘우치는 거면
도담도담 더 크겠다



나 순 옥

- 93년 12월 《중앙일보》신인문학상 당선
- 94년 1월 《조선일보》신춘문에 시조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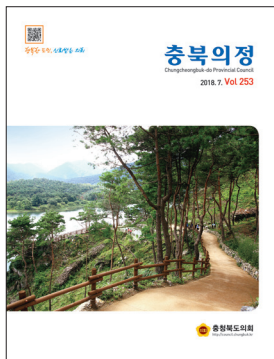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8. 6. Vol 253

Contents



괴산 산막이옛길

산막이옛길은 산골마을인 산막이 마을까지 연결됐던 옛길로서 흔적처럼 남아있는 옛길을 복원한 산책로이다.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자연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산과 물, 숲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괴산의 백미로 꼽을 수 있는 곳이다

사진제공/괴산군청

- 04 | 제364회 임시회 주요내용
- 06 | 제10대 충북도의회 발자취
- 14 | 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위 활동 마무리
- 15 | 각 상임위원회 활동
- 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22 | 제364회 임시회 주요 처리의안
- 24 | 의정활동 이모저모
- 26 | 제11대 도의회 의원 당선 축하
- 28 | 건강상식
- 29 | 법률상식
- 30 | 의정논단

- 발 행 일 : 2018년 6월
- 발 행 인 :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양희
- 발 행 처 : 충청북도의회
- 구독신청 :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 화 : (043) 220-5123
- F A X : (043) 220-5119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buk.kr>



충청북도의회는 6월 15일 제364회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등 주요 현안들을 심의·의결하며 제10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제10대 의회 여정 마무리

지역발전 · 현안해결에 앞장서며 역동적 의정활동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기치로 ‘일하는 의회상’ 정립

지난 2014년 7월 출범한 제10대 충청북도의회는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기치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도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지난 4년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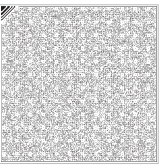
제10대 도의회는 지난 4년 동안 도민의 손과 발이 되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도의회는 그동안 지역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494건, 지역현안과 도민의 염원을 담은 각종 건의안과 결의안 등 42건을 처리했다. 이는 제9대 의회보다 19%나 증가한 것으로, 총 812건의 안건을 처리하

여 도민들로부터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도의회는 또 ‘KTX 세종역 신설백지화 촉구 건의안’과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이송하고 이에 대한 실현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도민 역량 결집의 구심점 역할로서 ‘문장대 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북의 단합된 힘을 대내·외에 보여주며 충북도민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의 본격적인 추진도 그동안 도의회가 벌인 주목할 만한 사업이다. 도의회는 도민의



얼굴이자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청사진립을 전격 추진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활용공간은 물론 도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반석을 마련했다.

또, 도의회는 항공정비산업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항공정비산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론회와 청주에어로폴리스 및 MRO 산업 발전방안 분석 토론회, 각종 현안과 관련된 공청회 등 지역현안과 관련된 토론회를 65회 개최하여 ‘연구하는 의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특히, 도의회 사상 최초로 시도한 ‘2018년도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는 예산안을 사전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예산의 효율적·균형적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연간 100여 차례 이상 생생한 삶의 현장을 찾아 도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으며, 어려운 이웃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민생의회’를 실천하기 위해 발로 뛰었다.

도의회는 이밖에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과 러시아 연해주의회와의 교류협력 체결,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한 의정체험 확대 운영, 본회의장 음악회 개최 등을 추진하며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다.

제364회 임시회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안 의결

한편 도의회는 6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64회 임시회를 열어 ‘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기타 현안들을 심의·의결했다.

6월 15일 실시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기타 안건들을 의결했다. 6월 22일 실시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6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각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회 마지막 날인 6월 27일 실시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기타 현안들을 의결하며 제10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도민과 함께 하고, 도민의 어려운 점 살핀 제10대 의회 4년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의정목표 실현 앞장

2014년 7월 8일 개원한 제10대 충북도의회는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의정목표로 각계 각층 도민의 소리를 오롯이 담고, 도민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도민과 함께해 온 도의회는 그동안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와 중부고속도로 조기 착공 촉구,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설립 촉구 등 지역현안마다 앞장 서 충북도민들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펼쳤다.

또, 지난해 도정 주요사업 현장과 청주 지역 등의 집중폭우 피해 현장, 제천화재참사 현장을 찾아 피해민들을 위로하는 등 도민의 고통을 함께하는 도의회가 되고자 노력했다.

제10대 충북도의회가 4년간 남긴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1 제천 대형화재 참사 유족 위로 및 지원에 노력

도의회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관련해 화재현장을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2018년 1월 도의회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화재참사 성금으로 모금한 수재의연금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건넸다.

2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조속한 설립 촉구

도의회는 2017년 11월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국토교통

부 등에 제출했다. 도의회가 모기지 항공사 설립을 촉구하게 된 것은 청주국제공항을 더욱 활성화하여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비롯됐다.

3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조속 증설 건의

도의회는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도의회는 2017년 9

월 “청주원외재판부를 증설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건의문을 채택해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등에 이송했다.

4 충남도와 연대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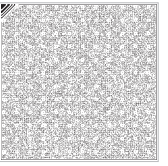
도의회는 2016년 2월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해 충남도의회와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국토교통

부를 방문해 ‘국토부와 일부 정치인 등은 철도선용량 확충 사전타당성조사 철회’ 등 KTX세종역 신설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5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증진을 위한 노력

도의회는 2017년 12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

의문’을 채택해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라’고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발송했다.



6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방안 모색

도의회는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정책복지·건설소방위원회는 6월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오염원 및 계절별 분석데이터 측정 등 의견을 개진했다.

7 FTA체결 관련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 요구

도의회는 2014년 7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

하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농어민들의 어려움과 ‘FTA 파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농어촌을 돕기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8 도의회 중재로 충북도·도교육청 무상급식 타결

도의회는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갈등관계에 있던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여 기

사회견을 열고 중재안을 제시·발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력한 결과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이 무상급식 분담률에 전격 수용하도록 유도했다.

9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선정 정부에 강력 요구

도의회는 2016년 4월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건

의문을 통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KDI 본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도민 열망을 담아 청와대 등 관계부처에 촉구했다.

10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도의회는 2016년 2월 제345회 임시회를 열어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엄재창 의원이 제안한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각 당 대표 및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에게 발송했다.

11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 규탄·즉시 중단 촉구

도의회는 2015년 7월 의회 현관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

화 정책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규탄대회에서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축소, 도시첨단산업단지 수도권 추가지정 등을 요구했다.

12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착공 강력히 요구

도의회는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 착공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교통량에 따른 주변 여건상 중부

고속도로 확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조속히 착공해 달라”고 청와대, 국토교통부 등 중앙 관계부처에 송부했다.

제10대 의회 주요 의정

1

제천 대형화재 참사 유족 위로 및 지원에 노력



도의회는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화재 참사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도의회는 2018년 1월 15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충북도의회 적십자 특별회비와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고, 1월 2일 전

국 시·도회의의장협의회가 제천 화재참사 성금으로 모금한 수재의연금 800만원을 전달받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전달했다.

전국 시·도회의의장협의회는 성금을 전달하며 “조금이나마 피해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고자 정성으로 성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도 설 명절을 맞아 도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스포츠센터 대형화재 참사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제천지역 전통시장인 동문시장을 방문해 제수용품과 지역 특산품, 생활필수품을 등을 구입했다.

동문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마친 도의원들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지역경제 정상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제10대 의회 주요 의정

2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조속한 설립 촉구

도의회는 2017년 11월 29일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도의회가 모기지 항공사 설립을 촉구하게 된 것은 충청권 인구증가와 청주국제공항 이용자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청주국제공항을 더욱 활성화하여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비롯됐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청주국제공항은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국내선 여객수 31.5%, 국제선 여객수 21%가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항 경제권의 육성은 청주국제공항의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청주국제공항이 흑자로 전환된 것은 그동안 국제노선 확대와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추진, 저비용 항공사의 취항확대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강조하며, “여기에 거점 항공사까지 설립되면 이용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청권 인구는 세종시 정착,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맞게 청주국제공항도 인프라를 확충하여 행정수도 관문공항의 역할을 하도록 거점 항공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앞으로의 중부권 인구유입과 경색됐던 한·중 관계 해소 등으로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에서 조속히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 설립 면허를 승인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조속 증설 건의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도의회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대법원장 등에 이송했다.

도의회는 2017년 9월 11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1인당 접수 및 처리 사건의 과다는 부실재판의 우려를 낳아 충청도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충북 도민이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대법원이 적극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충북 도민은 청주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의 관할이 대전고등법원(본원)이

었던 관계로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던 중 2008년 9월 1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가 설치되었다”며 “초기에는 청주원외재판부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배석2)의 1개 재판부로 운영되다가 사건 수의 증가로 청주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 원외재판부를 추가로 만들어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는 2개 재판부로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와 같은 사정에도 청주원외재판부의 1인당 접수 사건은 전국 최고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법관 1인당 처리사건도 전국에서 전주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1인당 접수처리 및 사건처리의 과다는 결국 부실재판의 우려를 낳게 되어 충청도민들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와 연대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 요구



충북도의회는 충남도의회와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해 공동 대응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도의회는 2016년 2월 6일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해 충남도의회와 ‘공동 연대전선’을 구축하고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KTX세종역 신설과 관

련한 일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면담하고 서한을 전달한 의원들은 철도선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문을 통해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된 세종시 일부 정치인들이 시민 교통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KTX세종역 신설을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어 그동안 굳건히 지켜오던 충청권 공조의 틀을 깨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일부 정치인, 자치단체장은 KTX세종역 신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또 2017년 4월 19일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세종역을 신설하면 오송역은 ‘저속철’로 전락 되므로 KTX세종역 신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0대 의회 주요 의정

5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증진을 위한 노력

도의회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농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2017년 12월 22일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의원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발송했다.

도의회가 건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은 30년 만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가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새로운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책무가 반영되기를 바라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농업이 생산성 이외에도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전통문화 계승 등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최근에는 식품안전과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등의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며 그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인식 아래 농업·농민 보호에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중요성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하고 국가의 책무를 관련 법령에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국가의 역할 없이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과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제10대 의회 주요 의정

6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방안 모색



도의회는 충북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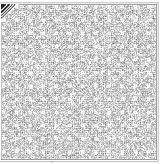
도의회 정책복지·건설소방위원회는 6월 2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져 도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충북의 호흡기 계통 질환자 발생률이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 및 경보 시스템 현실을 진단하고 절감대책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원,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의 취지 설명에 이어 2시간 30여분에 걸쳐 충북의 미세먼지 현황 및 도차원의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수립을 위해 대기조건과 다양한 오염원 및 계절별 분석 데이터 측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도민건강에 초점을 두고 미세먼지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안됐다.



FTA체결 관련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 요구

도의회는 2014년 7월 25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는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도의회가 이번에 건의문을 채택한 것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FTA 파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버린 농어촌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다.

도의회는 제안 이유에서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는 작년 말 현재 46개국에 이르며, 세계경제의 56%가 우리의 경제영토에 편입되어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칠레·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의 수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FTA 체결 국가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세계 4대 축산 강국으로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와 도산은 자명할 것이며, 현재 중국과 수차례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FTA가 체결되면 국내 농어업과 농어촌은 더욱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산업분야가 있는 반면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FTA 체결로 어려운 농촌을 돕고 농어업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도의회 중재로 충북도·도교육청 무상급식 타결

도의회는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갈등관계에 있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의 무상급식 분담률을 극적으로 합의하도록 유도했다.

이시종 도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 이언구 도의회 의장은 지난 2월 2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민선6기 무상급식 최종 합의서’에 서명해 좌초위기까지 놓였던 무상급식 분담률로 인한 1년여 동안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는 충북도지사와 도교육감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도지사·도교육감과의 대담, 대집행부질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수차례 촉구해 왔다.

도의회는 갈등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

이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 하에 2015년 10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타결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발표하고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중재안에 대한 수용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도의회의 중재안 제시에 충청북도는 2015년 10월 20일 ‘수용’을 선언 했고, 도교육청에서도 전격 수용하게 되면서 지금의 ‘무상급식 합의안’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언구 의장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하여 전국 확산의 선도적 역할을 했던 충청북도에서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도민들에게 큰 걱정을 안겨 주게 되어 송구스러웠다”며 “그러나 이제라도 양 기관의 통 큰 양보로 합의에 이르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제10대 의회 주요 의정

9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선정 정부에 강력 요구

도의회는 2016년 4월 26일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 발송했다.

이번 건의문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1980년 복선화 이후 35년 만에 161만 충북도민의 숙원 사업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된데 이어, 이번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KDI 본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열망을 전달하기 위해 채택하게 됐다.

도의회는 “충북선철도 조치원~제천봉양 구간(115km)은 호남고속철도~충북선~중앙선~원주·강릉선 연결을 통한 국가 X축 고속철도망의 마지막 완성구간”이라며 “특히 충주~제천봉양 구간(32km) 우선 착수는 북부권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충북선 운행의 위험구간을 원천 해소하고, 중앙선 연결을 통해 강호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에서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며 “향후 본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회 명의로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건의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충북이 철도친화도로 거듭나고, 국가 X축도망의 중심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2016년 상반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은 물론 본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제10대 의회 주요 의정

10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도의회는 2016년 2월 4일 제345회 임시회에서 임재창 의원이 제안한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각 당 대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등 관계부처에 발송했다.

도의회가 이번에 건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은 소규모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자 문화의 중심지이고 주민들의 소통과 어울림의 터전이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 미비’라는 제목으로 교육부에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으며, 교육부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통보하여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와 교육과정 정상화를 이유로 농촌지역 초중등학교를 살리기 보다는 폐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새로운 기준대로라면 충북도에서는 초등학교 118개, 중학교 36개, 고등학교 7개 등 전체 484개교 중 33.3%인 161개교가 폐교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 “농촌지역의 초중등학교가 사라지면 지역 주민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농촌사회 해체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교육부 권고안의 농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통학거리와 농촌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백년대계를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등 통폐합 반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 규탄·즉시 중단 촉구



도의회는 2015년 7월 도의회 현관 앞에서 도의원 31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열린 규탄대회는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축소 △도시첨단산업단지 수도권 추가 지정 △

GB 해제 취약지역 용도제한 완화(준공업지역 허용) 등 수도권 규제법령의 개정과 △현대차 한전부지 개발절차 축소 △용산 미군부지 개발 지원 대책 발표 등 노골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및 투자활성화 정책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정부 및 관련부처, 국회에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도의회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국가 균형발전·지방분권 등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허공에 외친 메아리뿐이었다”며 “정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대원칙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밤낮없이 땀 흘려온 비수도권 지역 국민들의 열정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착공 강력히 요구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일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 착공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송부했다.

이번 건의문 채택은 지난 11월 19일 국토교통부가 “세종~서울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2016년도에는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세종~서울 고속도로 신설이 충북에 경제·사회적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충북은 중부고속도로 개통 후 현재까지 남이~호법 구간에 위치한 4개 시·군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6,737개 업체이며, 이중 유통물류업체가 101개 업체로 기업물류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 “교통량에 따른 주변 여건상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세종~서울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약 1조원이 투입되는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의 경제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정부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관련 예산의 국회 원안 통과와 함께 당초 국가계획에서 제외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내년도에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종료 및 평가서 반려' 확정

민·관·정이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



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는 6월 15일 제6차 회의를 열어 「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특위활동을 마무리 했다.

충북도의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는 6월 15일 제6차 위원회를 열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2년여 동안의 특위활동을 마무리 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6년 5월 4일 경북 상주시가 문장대온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함에 따라, 이로 인한 수질오염원이 충북으로 유입된다는 위기감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그동안 제6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고 충북도민들과 문장대온천개발저지 대책위원회, 전국 환경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공조하며 현장방문, 관계기관 방문, 쉼기대회, 성명서 발표, 신문기고, 인터뷰, 5분 자유발언 등을 실시하며 문장대온천개발 저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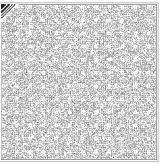
특히, 지난 2018년 2월 6일 경북 상주시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구조합 측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접수수는 두 차례 대법원 판결로 사업시행허가 취소됐고, 대구지방법원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반려 등 세 차례나 무산되면서 이른바 ‘삼진아웃’ 당하였음에도 이를 또 다시 강행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법치를 위협하는 명분 없는 행위임을 선언하고 개발저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또한, 문장대온천개발저지 대책위원회와 함께 민·관·정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운동으로 확산시켜 전 국민 쉼기대회를 개최하고, 대구지방법원, 환경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온천개발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공조의 노력으로 2018년 6월 1일 대구지방법원이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종료 및 평가서 반려’를 확정하며, 문장대온천개발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에 도의회는 “민·관·정이 우리지역 환경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일치단결된 마음으로 이뤄낸 노력의 값진 성과”라고 밝히며, “제10대 의회가 2018년 6월 30일 종료하는 시점에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지만, 항구적으로 문장대 온천개발의 싹이 다시는 자라지 않도록 제11대 의회에서도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도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민관정이 함께하는 온천개발 저지 활동 △온천개발저지 대책위원회와 저지활동 공조 △온천개발 저지 관련법률 개정안 통과 노력 △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언론 홍보 △연구용역을 통한 개발저지 대응 논리 개발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64회 임시회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등 의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병운)는 제364회 임시회 회기 중 한 차례 위원회를 열고 「제3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2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제3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제364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6월 20일에 충청북도지사가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정정예산」을 제출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위해 상정됐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르면,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도지사나 교육감으로부터 시정연설 또는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의 제안설명 청취를 위해 본회의를 한 차례 추가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합심사 일정 추가를 골자로 하는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정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02억4306만1000원보다 102만3000원이 증액된 102억4408만4000원으로 0.01%가 증가됐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제11대 도의회 도의원 정수 1명 증가(31명→32명)에 따라 의원용 노트북·컴퓨터·모니터 구입비 3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의회사무처 직원현원 1명 감소(83명→82명)로 기본수용비·급량비·기본여비 등 기본경비 277만7000원이 감액 계상됐다.

심사결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모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 편성이라고 공감하면서 별다른 질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를 주재한 임병운 위원장은 “그 동안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높은 관심과 열정으로 본 위원회가 충북의정의 조정자 역할을 착실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참석위원과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6월 2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정정예산안」 등 기타 현안을 심사·의결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64회 임시회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정



위원장
김영주 의원



부위원장
이양섭 의원



박우양 의원



박종규 의원



윤은희 의원



6월 2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등 기타 현안을 심사·의결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6월 22일 제10대 의회 마지막 위원회를 개최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며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국고보조금 변경·확정통보에 따른 사업비의 지방부담금 조정, 지역상생발전기금 40억원, 2017년 회계연도 순세계영여금 849억원 등을 반영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 사업비와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자 보수 증감 등 시기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어 실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북개발공사 융자 신청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욕구에 비해 인프라 부족 및 지원체계 미흡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부모나 보호자의 신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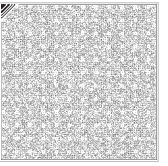
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 따라 지속적인 별도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1만여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다.

김영주 위원장은 “그동안 정책복지위원회는 충북도의 복지·여성 등의 담당분야에 대한 도정(道政)을 철저히 살피고 견제·감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며 도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도의회를 신뢰하고 지지해준 162만 도민의 성원과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64회 임시회

충청북도 공인조례·정보공개 조례 등 일부 개정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광옥)는 2018년 6월 22일 제 364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개의회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또 박봉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연철흠 의원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필요성을 묻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한범 의원은 복합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 공모에서 미 선정되어 삭감된 사유와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 당초예산에 계상돼야 할 예산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북도 연계협력형 중점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북부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파악되는데 향후 대청호를 비롯한 남부권 관광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구 의원은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을 검토하며 도내 시·군 예술단이 시·군 교류 및 순회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상호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봉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는 공인조례의 별지 제1호~제4호 서식을 현행화 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수수료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안 가결했다.

또,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충북개발공사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금을 증액하고, 신규 사업을 위한 비용자성 사업비를 증액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했다.



위원장
최광옥 의원



부위원장
연철흠 의원



박봉순 의원



박한범 의원



이언구 의원



6월 2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64회 임시회

농업·산업경제 활성화 위한 신성장 산업기반 구축 앞장



위원장
이의영 의원



부위원장
황규철 의원



임병운 의원



6월 2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현안을 심사·의결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의영)는 제364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현안들을 심사·의결하며 제10대 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22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경제통상국,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임병운 의원은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예산의 재원과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입주기업의 교통편의 제공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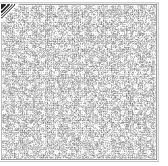
이어, 실시한 경제통상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황규철 의원은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이 시·군 담당부서의 사업인지 및 홍보부족 등으로 사업신청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각 시·군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의영 위원장은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전통시장 내에 화재발생 감지시설을 설치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즉시 화재진압 대응체계’를 마련해 소·대형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어 진행된 계수조정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경제·농정 분야의 긴급요구 현안사업들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며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는 제364회 임시회를 마치며 “제10대 의회 4년간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한편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고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 “각 시·군지역의 산업단지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기반 구축, 6차 산업을 활용한 충북농업·농촌 발전방안 모색, 곤충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한 충북4% 경제 실현에 앞장서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제364회 임시회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인력운영 대책 촉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임순목)는 제364 회 임시회 기간 중인 6월 22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난안전실 등 5개 실·국을 대상으로 「2018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재해 복구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재난 대응력 향상 및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한 ‘도민이 안전한 충북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재난지원금 및 안전분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반영과 국고보조금 최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실시한 균형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지역교통 안전환경개선 사업, 저상버스 도입, 지방도 유지관리 등을 통해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교통편의 증진 도모에 주안점을 두고 초등학교 주변보도 설치사업과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지방도 정비 등 특별교부세 교부내역 반영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증액계상 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 가결했다.

또한, 바이오산업국 추경예산안은 바이오벤처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연구개발사업 육성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 메카 충북 입지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됐고, 환경산림국은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관리강화, 대기환경 개선대책 추진 등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충북 조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소방본부에 대한 추경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대상사업 반영과 소방무선통신장비 보강, 노후 소방차량 보강 등 신속한 재난현장 대응 강화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다.

장선배 의원은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인력운영 사업의 인력확보가 되지 않아 2개 시·군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순목 위원장은 “오늘로서 제10대 의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된다”며 소회를 말한 뒤 “그동안 도민들의 생활현장 속에서 수렴한 생생한 목소리를 각종 정책에 반영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



위원장
임순목 의원



강현삼 의원



김봉희 의원



박병진 의원



장선배 의원



6월 2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타 현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위원회

제364회 임시회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개발과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



위원장
정영수 의원



부위원장
이종욱 의원



김학철 의원



윤홍창 의원



이숙애 의원



6월 15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제10대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와 교육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인 6월 15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현안을 협의하고, 제10대 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소회하며 교육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제10대 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교육위원회는 제10대 의회 4년간 53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고 200여건의 안건과 기타 현안들을 심사·의결하며 충북 교육발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2014년 7월 1일부터 의정활동에 돌입한 교육위원들은 도민의 교육적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며,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주요 현안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도민·학부모·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책을 강구하는 등 소통 강화에도 앞장섰다

또, 충북도 교육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해 실행 여부와 실효성 있는 교육적 성과, 교육만족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견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며 도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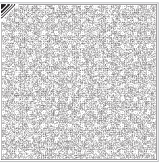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 등과 적극적

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상생과 협치의 21세기 충북교육이 되도록 책임감과 열정으로 그 소임을 다해왔다.

또한, 매년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기관의 특성을 살린 특색사업과 주요 중점사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요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며 대안제시와 함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 ‘충청북도 학습부진아 교육지원 정책 토론회’와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 정책 토론회’, ‘충청북도 돌봄교실과 유치원방과후과정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 ‘충청북도 교방과후학교 효율화 방안모색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또,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문」을 채택해 소규모 교육지원청 현채유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철회, 농어촌 소규모학교 특별교부금 지원정책 수립 등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활발한 의원 연구 활동으로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64회 임시회

충청북도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진)는 제364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했다.

제364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6월 20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조정 및 법정교부금,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조정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우선 반영했으며,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국가 추경사업 및 상반기 추진된 조직개편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과 여건변화에 따라 반영이 필요한 신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4조1809억8975만7000원 보다 1282억6695만8000원(3.1%)을 증액한 4조3092억5671만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1201억9716만2000원(3.2%) 증액된 3조8353억838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80억6979만6000원(1.7%) 증액된 4738억7288만5000원이다.

이중, 도비 2000만원 이상을 반영한 신규사업은 5건

에 10억7000만원으로, 도정비전 홍보물 교체 및 정비 1억원, 세계무술연맹 연례총회 2000만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7억원, 전략산업 아세안시장 개척사업 5000만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대국민 홍보비 3억원 등이다.

연구용역비는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5억원,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연계 스포스테마타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1억원 등 5건에 8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소방특별회계로 소방관 개인안전장비 구입 및 노후 소방차량 보강, 재난안전체험관 설치 사업비 등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또한, 금번 추경에 변경된 기금은 총 2종으로 지역개발기금이 838억5447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도 8억7975만원이 감액됐다.

예결위원과 도 집행부 관계관과의 질의·답변 후 진행된 예결위원 간 계수조정 결과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박병진 위원장은 “그 동안 예결위가 충북도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신 위원님들의 열정·노고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6월 2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364회 임시회 주요처리의안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김영주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
-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
-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추진 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
-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봉순 의원)

[제안이유]

- 법규명과 담당부서의 명칭을 현행과 맞도록 변경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인조례의 별지 제1호~제4호 서식을 현행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 법규명 현행화(안 제1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의 현행화(안 제8조 및 제12조)
 - 정보화담당관 → 정보화담당부서(안 제8조)
 - 정보화담당관 → 정보화담당부서장(안 제12조)
- 별지 제1호 ~ 제4호 서식 변경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폐기자(분실자) → 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봉순 의원)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수료 개정사항 반영
- 그 밖에 법규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수수료 근거 상위법령 일부 개정 사항 반영(안 별표)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전자파일 1M 초과시 1M당 100원→무료
- 법규 명칭의 약칭 사용 변경(안 제5조)
 - 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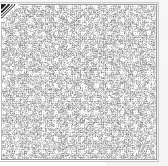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토지 기부채납 취득
 - 충청북도 장애인화관 건립
 - 군유림(임야) 교환 취득
- 재산의 처분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부지 매각
 - 도유재산(도 → 충주시) 매각
 - 공유재산 교환 처분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사무이관에 따라 위임부서를 변경하고, 기구개편으로 변경된 과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무이관에 따른 위임부서 변경
 - 협동조합 관련 업무(5건) : 경제정책과→지역공동체과
 - 대기배출시설·오염·석면관련 업무 등(37건):환경정책과→기후대기과
-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
 - 축산과 → 축수산과(18.1.1.) : 9건, 교통물류과→교통정책과(18.4.6.) : 65건

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제안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장)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온천개발 백지화를 위해 노력해 옴

[주요내용]

- 특별위의 노력으로 '18.6.1.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종료 및 평가서 반류를 확정하여 문장대온천개발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된
- 제10대 의회가 '18.6.30. 종료하는 시점에 특별위 활동이 마무리되지만, 항구적으로 문장대 온천개발의 싹이 다시는 자라지 않도록 제11대 의회에서도 발본색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규정」개정(15.1.6.)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안 시달(16.9.22.)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안 별표)
 - [현행] 제1호 46천원(도지사는 실비), 제2호 40천원
 - [개정] 제1호 실비, 제2호 실비 (제2호 상한액 : 서울 70천원/ 광역시 60천원/ 그 외 50천원
-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명문화(안 제5조제4의2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개정(안 제2조 등)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에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내용]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4,309,257	4,180,990	128,267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역개발기금은 충북개발공사 용자신청에 따른 용자금 증액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증액과 이자수입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신규사업을 위해 비용자성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함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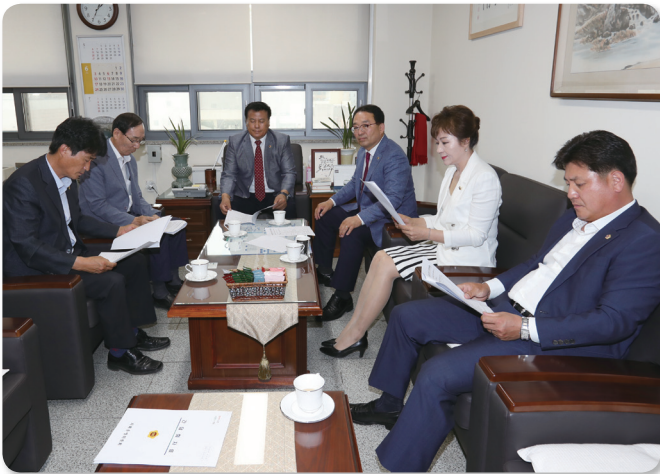
기금 명	2017년도말 조 성 액	2018년도 운용계획				2018년도말 조 성 액
		당초		변경		
		수입	지출	수입	지 출	
합계	636,493	88,874	142,710	89,176	173,910	551,759
지역개발기금	634,388	88,856	142,710	88,856	172,710	550,534
남북교류협력기금	2,105	18	0	320	1,200	1,225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충북도의회 김양희 의장, 장선배 부의장, 최광옥 위원장, 이숙애, 박봉순, 연철흠 의원 등 도의원들이 6월 6일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2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제36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기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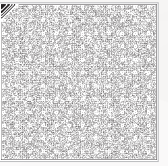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6월 2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현안을 협의하고 군형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안」을 검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누었다.



충북도의회는 5월 3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앞두고 도내 각 시·군의회 의사담당 공무원들을 초청해 의회 운영과 회의진행에 대한 사례중심의 정보를 공유했다.



충북도의회는 6월 1일 청주 모충초·옥천 동이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를 체험하게 했다.



충북도의회 김양희 의장이 5월 11일 청주시에서 주최한 '제17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충북도의회 김양희 의장과 도의원들이 충남 아산 이문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8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식에 참석해 충북 선수단을 격려하고 필승을 기원했다.



충북도의회는 6월 27일 제364회 임시회를 마치고 도청 구내식당에서 도의원들과 이시중 도지사, 김병우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폐회연을 가졌다.



충북도의회는 6월 2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11대 도의원 당선인과 사무처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갖고, 제11대 의회 슬로건을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로 선정했다.

의회 제11대 충청북도의의회



이숙애
(李淑愛)
의원
더불어 민주당
청주 1 선거구



장선배
(張善培)
의원
더불어 민주당
청주 2 선거구



박문희
(朴文熙)
의원
더불어 민주당
청주 3 선거구



허창원
(許暢原)
의원
더불어 민주당
청주 4 선거구



육미선
(陸美善)
의원
더불어 민주당
청주 5 선거구



김영주
(金永柱)
의원
더불어 민주당
청주 6 선거구



이상식
(李相植)
의원
더불어 민주당
청주 7 선거구



박상돈
(朴相敦)
의원
더불어 민주당
청주 8 선거구



연철흠
(延哲欽)
의원
더불어 민주당
청주 9 선거구



임기중
(林基仲)
의원
더불어 민주당
청주 10 선거구



이상욱
(李商旭)
의원
더불어 민주당
청주 11 선거구



이의영
(李義寧)
의원
더불어 민주당
청주 12 선거구



정상교
(鄭相敎)
의원
더불어 민주당
충주 1 선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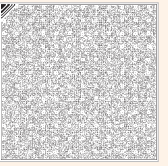
서동학
(徐東鶴)
의원
더불어 민주당
충주 2 선거구



심기보
(沈起輔)
의원
더불어 민주당
충주 3 선거구



박성원
(朴成元)
의원
더불어 민주당
제천 1 선거구



의원 당선 축하합니다!



전원표
(全原杓)
의원
더불어 민주당
제천 2 선거구



오영탁
(吳永鐸)
의원
자유한국당
단양 선거구



박병진
(朴炳晉)
의원
자유한국당
영동 1 선거구



박우양
(朴愚陽)
의원
자유한국당
영동 2 선거구



하유정
(河裕晶)
의원
더불어 민주당
보은 선거구



박형웅
(朴亨用)
의원
더불어 민주당
옥천 1 선거구



황규철
(黃奎喆)
의원
더불어 민주당
옥천 2 선거구



이상정
(李尙政)
의원
더불어 민주당
음성 1 선거구



김기창
(金基昌)
의원
더불어 민주당
음성 2 선거구



임영은
(林榮殷)
의원
더불어 민주당
진천 1 선거구



이수완
(李壽完)
의원
더불어 민주당
진천 2 선거구



윤남진
(尹嫻溱)
의원
더불어 민주당
괴산 선거구



연종석
(延宗錫)
의원
더불어 민주당
증평 선거구



송미애
(宋美愛)
의원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이옥규
(李玉揆)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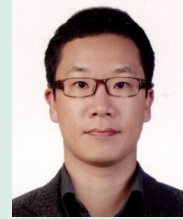


최경천
(崔景天)
의원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성인예방접종의 중요성

김희성 내과장
(청주의료원)



최근 성인에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자료를 보면 백신으로 예방 할 수 있는 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수가 소아에서 매년 500명 정도인데 성인에서는 약 5만명~7만명으로 100배 가량 많기 때문이다.

원인균과 사망자 수를 보면 폐렴구균이 매년 4만명, 인플루엔자 2만명, B형간염 5000명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2007년부터 대한감염학회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내성인예방접종 권장안을 발표했고 대표적인 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파상풍/백일해에 대해 알아보자.

1. 인플루엔자 : 국내에서 매년 겨울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으며 약 3000여명이 사망하고 사망자 대부분은 노인 또는 만성질환자이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인플루엔자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고 병원입원과 사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2. 폐렴구균 : 폐렴구균은 노인에서 높은 사망률(평균 5~7%)을 보이는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전체 원인균의 25~40%를 차지한다.

폐렴구균 백신은 23가 다당백신(프로디악스23, 뉴모23)과 13가 단백결합백신(프리베나13)이 있는데, 23과 13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백신이 예방할 수 있는 폐렴구균의 종류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을수록 좋지만 면역효과 자체는 단백결합백신이 더 우수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23가 다당백신으로 무료예방접종 사업을 펼치고 있다.

3. 대상포진 : 대상포진은 수두를 야기하는 동일한 바이러스인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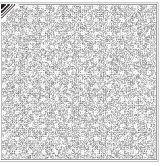
수두를 앓은 후 몸 안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 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요 증상은 통증이지만 매우 드물게 폐렴, 청력문제, 실명, 뇌염 또는 사망을 야기할 수 있다.

4. 파상풍 · 백일해 : 파상풍은 백신접종에 의해서만 면역을 획득할 수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10년마다 추가접종을 해야 면역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국내 백일해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성인의 만성기침 환자에서 백일해 항체가 높다는 경향을 보여 성인에서 백일해 백신 추가접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명칭	특징	접종대상 및 시기
인플루엔자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높음 -65세 이상노인, 만성병 환자에서 더욱 위험	-모든 성인 -매년 10월~12월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유행 시 언제라도 접종
폐렴구균 감염증	-폐렴, 뇌수막염, 혈증 등의 침습적 감염위험 증가 -65세 이상에서 더욱 심각	-65세 이상 모든 성인 -만성질환이 있는 모든 성인
대상포진	-50세 이상에서 2/3이상 환자 발생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고령자에서 더욱 심각	-60세 이상 성인 -50세 이상에서 접종가능
파상풍/백일해	-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며 심각한 합병증 발생가능	-모든 성인 -10년에 한번씩 접종 해야 함.



‘소멸시효’ 염두해 두어야

박 종 일 변호사
(법무법인 청주로)



단지 시간이 흐르는 것만으로 없었던 권리가 생기기도 하고, 있었던 권리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를 ‘시효’라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는 것만으로 없었던 권리가 생기는 것을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여 ‘취득시효’라 하고, 있었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여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법에서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이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없어져 서로 법적인 다툼을 해결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인데, 법에서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정한 ‘일정한 기간’을 ‘시효기간’이라고 합니다.

법은 통상 채권의 ‘시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도 이보다 짧은 단기의 ‘시효기간’을 인정하는 예외를 많이 두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계속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효’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컨대, ‘시효기간’이 상사채권은 5년이고, 물품대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3년이며, 1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준다고 준다고’ 하여 계속 기다리다 보니 ‘시효’가 지났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 ‘시효’가 흐르지 못하게 중단시키는 것을 ‘시효중단’이라고 하는데, ‘시효’가 중단되려면 ①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청구를 하거나 ② 가압류·가처분을 하거나 ③ 채무자가 ‘준다고 준다고’ 한 것(채무승인)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채무자가 ‘준다고 준다고’ 한 것만으로도 시효가 중단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가 없어 인정받지 못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그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이러한 3가지 중 어느 하나를 취하면 그때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법에서 정한 ‘시효’가 시작되는 것이지만, 특히, ② ‘가압류·가처분’한 경우 그 ‘가압류·가처분’이 살아 있는 한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매우 효과적인 ‘시효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효기간’이 지나 권리가 ‘소멸’한 후에도 채무자가 ‘시효는 지났지만 채무를 이행하겠다’라고 하면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시효는 지났지만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꼭 말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없이 빌린 돈이나 그 이자를 지급하는 등 채무를 일부라도 이행하면 묵시적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없어졌던 권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법은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법의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법을 잘 모르면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도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송에서 기차 타고 파리 가자’



장 선 배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오송에서 기차 타고 파리 가자’

6·13 지방선거 때 눈길을 끌었던 슬로건 중 하나다. 지난 4월 24일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성과가 지방선거에 반영된 것이다.

정상회담에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군사적 긴장 완화, 상호교류 활성화, 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상봉 문제 협의, 경의선 철도, 도로연결 사업 추진 등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한 상호번영을 위한 교류협력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숱한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겠지만, 우리민족이 가야 할 길이 제시된 것이다. 이 판문점선언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재차 확인됐다.

1차~2차 남북정상회담 때도 국민들의 기대는 컸지만,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됐고 아예 과거로 돌아갔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은 형식 뿐만 아니라 내용도 파격적이어서 70여년 분단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사실, 이런 희망을 품는 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다.

다시 지방선거로 돌아가자. 이시종 충북지사 후보는 이번 3선 도전에서 강호축 철도 완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놔다. 목포~오송~제천~강릉~원산~청진~두만강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방안이다. 기존의 호남고속철도를 충북선으로 강원권과 연결하고 이어서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하자는 것이

다. 또 경부고속철의 경우 부산~오송~서울~평양~만포를 거쳐 중국횡단철도(TCR)과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꿈같은 일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꿈조차 꾸지 않는다면 가능성도 없다. 철도 연결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에 포함됐고 남북정상회담과 6월에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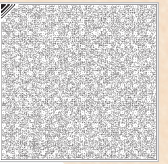
역사는 우리민족이 해양과 대륙으로 함께 나갈 때 번영을 구가했다는 걸 보여준다. 대양을 향해 가는 뱃길이 우리의 활로이듯, 대륙으로 향해 가는 철길은 우리 번영의 또 다른 문이다.

안타깝게도 대륙으로 나가는 길은 70년 동안 분단의 벽에 막혀 있다. 분단의 높은 벽은 우리의 의식조차도 대륙으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 대륙으로 나간다는 희망조차 점점 희미해져서 우리 의식도 스스로 반도의 섬에 갇혀 있다.

북한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철길이 언제 우리 앞까지 다가올지 모른다. 그러나 함께 꿈꾸면서 부단히 노력하면 대륙으로 나가는 길은 그만큼 더 빨리 열릴 것이다.

그 첫 시작이 38선에 갇혀 있는 우리의 의식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물리적인 경계는 당장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식만큼은 대륙으로 자유롭게 넘나들며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청소년과 다음 세대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 ● ●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을 꿈꾸며



박 봉 순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제10대 충청북도의회의원이 된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지난 4년간을 돌아보며 과연 우리나라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고민해본다.

본 의원이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이다.

벌써 민선 7기를 맞이하는 지방자치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변해야 할까?

첫째, 선거구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를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선택하고 있다. 그 결과 기초의원은 다양한 정당에서 당선인을 내고 있으나 광역의원은 대부분이 1개 정당이 독식하고 있다.

이번 광역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82.1%, 자유한국당이 15.3%가 당선되었다. 특히 영남권을 제외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93.4%가 당선된 반면 자유한국당은 5.2% 당선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당처럼 정당구도의 정치가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자치가 되어야 한다. 반면 기초의원들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55.1%, 자유한국당이 34.5%가 당선되어 보다 다양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광역의원도 중선거구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집안자치’를 이야

기 하며 가끔 자녀들의 비유를 듣다. 각 가정에서 독립을 원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까? 대학생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왜 자녀들은 독립하지 못할까? 바로 경제적 이유에서이다. 경제적 자립성을 갖추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가 독립을 하라고 허락 하더라도 경제적 이유로 인해 독립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이다. 재정적 자립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방자치는 허망한 꿈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세가 20%에 불과하다. 지방재정자립도 역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손을 벌려야 한다. 스스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는 많은 자치권을 주고 있지만 재정적 측면에서만은 아직도 자립권을 주지 않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정적 자립 위에서만 가능하다.

셋째, 지방자치를 하는 지방정치인과 주민들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 지방정치인들은 중앙정치에 기대지 말고,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말고, 주민과 지방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도 정당만 보고, 대통령만 보고 묻지마 투표를 하지 말고 지방을 위해 진정 필요한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변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될 것이라 생각한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 충청북도의회 인터넷방송 : <http://assembtv.cb21.net/>
- 트 위 터 : https://twitter.com/chungbuk_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